

촌보는 시설 개선과 지하수 영향 등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수위(수문 완전 개방)까지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대규모 생활용수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취수 기능 수위까지, 영산강 죽산보는 최저수위 바로 다음 단계인 하한 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보 개방은 인근 주민과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 수위까지 시간당 2~3cm 수준의 속도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확대 개방한 7개 보 가운데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6개 보는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해 2018년 영농기 시작 이후에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면서 효과 등을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취·양수장이 많아 전체 임시 용수공급 대책 추진이 어려운 창녕함안보는 농업용수 공급 등을 고려해 2018년 3월 말까지는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위를 회복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한강 이포보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상류 댐의 저수량을 관리 중인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등 나머지 7개 보는 그간 보 개방의 영향, 녹조, 용수 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배출가스 허위인증’ BMW·벤츠·포르쉐에 과징금 703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까지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BMW에 부과된 608억원은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BMW는 2012~2015년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천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 내용과 달리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 치를 맘대로 낮춰 기재했다. 환경부는 인증 서류가 위조되면 배출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BMW는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7천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크기·위치·촉매 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이 적용되면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BMW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8천246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도 2010~2015년 마진S 등 5개 차종에서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 표류하는 물관리 일원화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 방침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8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서 이른 시일 안에 일원화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9월에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가 국회에 구성됐지만 9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논의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이관하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결국 12월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법을 201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해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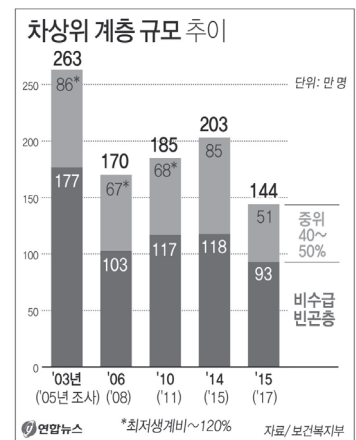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했다. 11월에 국회물관리일원화협의체가 연 공청회에서는 안전한 물 환경 조성,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통합 물관리를 위해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환경부·국토교통부의 중복 투자 개선,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 등으로 향후 30년간 약 15조7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정책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43.0%, 전문가 59.3%가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매우 반대’ 또는 ‘약간 반대’)한다는 비율은 국민 9.5%, 전문가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2017년은 복지 분야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정치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복지 개혁 또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복지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한층 강화한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그간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힘



겁게 살아가던 소외계층도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됐다.

6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가족위기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태조사에 응한 1천 500명 중 46.1%가 가족위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족위기의 유형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족관계 위기 34.5%, 자녀 돌봄이나 노부모 부양 위기 30.8%였다. 가족위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경제생활상의 어려움이 47.5%(중복응답 포함)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 보니 사회적 취약계층 양산과 가속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4분의 1 이상(26.8%)이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주거와 생활 등 생계를 잇기 위해 빚을 진 것으로 평균 부채는 3천897만원이었다. 연간 이자 액수만 따져도 가구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5천원에 달했다.

이들 저소득층의 부채 형태는 사채 비율이 9.1%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대보증금 5.9%, 카드빚 5.6% 순이었다. 정부의 서민금융을 이용한 것은 0.5%로 외상(0.9%)보다 적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채 규모가 작은 선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장년층의 부채는 2003년 2천900만원에서 2014년 5천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35~44세는 3천300만원에서 3천400만원, 45~54세는 3천80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55~64세 장년층은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 학비와 주거비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도 장년층이 13%(203만원)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5년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2015년 조사에서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22만2천533만원(1인 가구 156만2천337원)이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봤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라 추정한 한 달 벌이 211만원 이하(4인 가구)인 빈곤층은 309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 교육·주거급여를 포함한 총수급자는 165만 명이었다. 2015년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144만 명이었다. 이 중에서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 즉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했다.

이들 빈곤층 가구의 특징을 보면 1인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가 많다. 빈곤 가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은 27.2%지만 빈곤 가구는 65%가량을 차지했다. 노인 가구도 전체 가구에서 비율은 29.6%였지만 빈곤 가구에서는 60.3%였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노인 가구 비율이 90.3%로 매우 높았다. 이들이 일정 소득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런 비수급 빈곤 가구는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보다 오히려 더 가난하게 사는 소득 역전현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구체적으로 빈곤층의 경상소득을 보면, 수급가구는 월 95만 2천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가구는 월 49만 3천원, 기준 중위소득 30~40% 비수급 가구는 월 67만7천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런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에 나섰다.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간다는 것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교육부 박춘란 차관, 박 장관, 국토부 손병석 1차관.

복지부는 8월 10일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만한 대책을 내놨다. 빈곤시민단체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빈곤계층은 2015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급여 방식이 빈곤층의 자립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각종 복지수당의 지급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급여에 여전히 부양의 무자 잦대를 적용해 실질적 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았다.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라도 복지서비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실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거의 끊겼거나 부양의무자조차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전체 인구의 4.8%로 늘린다는 것이다. 인원으로 따지면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가구로 따지면 103만 가구에서 161만 가구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 대부분은 그간 복지급여에서 빠졌던 비수급 빈곤층이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돈을 버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3년 이내에 이들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빈곤층의 발목을 잡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2020년까지 3만5천 명이 생계급여, 7만 명이 의료급여, 90만 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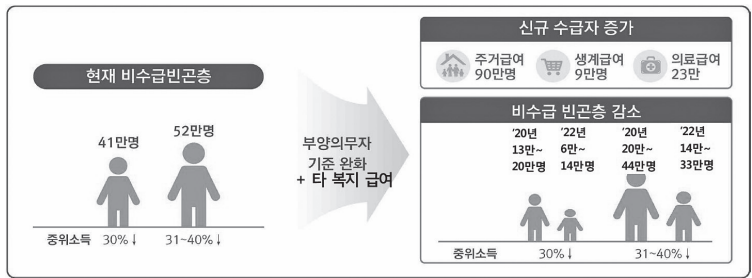
여기에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다른 사회복지 정책이 맞물려 상승효과를 내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 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65%(6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수급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더불어 급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환으로 의료급여 자기 부담 수준을 낮추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받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상한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6~15세 아동 본인부담금은 현행 10%에서 3%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20~30%에서 5~15%로,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도 10~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급되지만 3년 뒤에는 중위소득 45%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직전 3년간 주택 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올리기로 했다. 또 기준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택 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과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도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 인상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가 받는 교육급여는 현재 최저교육비의 절반 이하를 주지만 2020년에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학용품비는 현재 중·고등학생만 받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일자리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공되는 자활 근로 및 자활기업 일자리를 5만 개에서 3년 뒤 5만7천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활기업 수는 1천200개에서 1천80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자활 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9만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이 취업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늘리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보훈

■ 피우진 보훈처장 취임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을 주도할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62) 씨가 임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 여성 인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피 처장은 예비역 중령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화제였다.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피 처장은 특전사 중대장을 지내고 항공병과로 옮겨 1981년 여군 헬기 조종사가 됐다. 육군 헬기 조종사를 지내며 남성 군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천장'을 뚫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 끝에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